

200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자료제공 : 중소기업청

I.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감소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됨
- 내년 세계경제는 금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양호한 성장세는 유지해 갈 것으로 전망
 - 다만,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누적 확대 등에 따른 소비둔화 가능성, IT경기 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 상존

	'03년	'04년 추정			'05년 추정		
	(IMF기준)	IMF	WB	OECD	IMF	WB	OECD
세계성장률	3.9	4.6	3.7	3.4	4.4	3.1	3.3
미국	3.1	4.6	4.6	4.7	3.9	3.2	3.7
중국	9.1	8.5	7.7	8.3	8.0	7.2	7.8
일본	2.7	3.4	3.1	3.0	1.9	1.4	2.8
유로	0.4	1.7	1.7	1.6	2.3	2.3	2.4

2. 국내경제 전망

- 내년 국내경제는 수출호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높은 수출증가에 따른 기술적 반락으로 인해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내수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겠지만, 현재 가계부채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고유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금년도 5%대 성장달성은 물론,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

II.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경제의 중추
 - 사업체수('03) : 290만개 (99.8%)
 - 종사자수('03) : 1,000만명 (86.7%)
 -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비중도 계속 확대될 전망
 - 수출비중 : ('98) 31.7% → ('03) 42.2% → ('08) 50%
 - 생산액비중 : ('98) 46.4% → ('02) 50.8% → ('08) 53%
- * 자료 : KIET(산업연구원), '03.12 도전과 혁신, 도약의 길

2. 경제여건 변화와 중소기업의 중요성

- 경제여건의 변화
 - 세계화의 진전 및 글로벌 경쟁으로 경제의 양극화 심화
 - 고용없는 성장과 성장동력 약화로 이중고
 - * 국내총생산('03) 3.1% 성장에 고용은 0.1% 감소
 - 요소투입형 성장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여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필요

○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

□ 중소기업의 중요성

○ 성장동력의 근간

- 제품·기술주기 단축 및 다양한 수요에 신속·유연한 대응 가능
- 지속적인 창업·퇴출로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증진에 기여

(혁신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본질적 특성)

- 유연성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성 : 치열한 경쟁속에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차별화 노력
- 전문성 : 한 분야에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선택과 집중)
- 혁신성 : 창조적 파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

○ 고용창출의 주역

-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실업극복과 신규 고용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 창출처

*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78만명 고용이 감소된 반면, 중소기업은 314만명 증가

○ 국가균형발전의 열쇠

- 중소기업의 발전이 소득계층간,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을 완화하여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

Ⅲ. 중소기업의 최근 동향

□ 최근 전반적인 경기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 경영난도 지속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60%대로 저조하고, 대기업과의 격차가 지속

* 전체제조업(%) (03 3/4)76.9 → (03 4/4) 80.4 → (04 1/4) 81.5 → (04 2/4)80.5

* 중소제조업(%) (03 3/4)66.7 → (03 4/4) 69.5 → (04 1/4) 67.7→(04 2/4)68.5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이자보상비율	설비투자
대기업	(02)5.42→(03)5.96	7.2 → 6.6	255 → 429	△3.4 → 27.4
중소기업	3.39 → 2.49	10.2 → 5.4	274 → 256	44.0 → △3.4

□ 최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금리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출심사 강화로 대출증가세는 둔화

○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5월이후 상승세는 진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높은 수준

* 중소기업 대출(조원) : (02.12) 188 → (03.12) 225 → (04. 5) 235.5 → (7) 237.8

*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 (03.12) 2.1 → (04. 3) 2.8 → (5) 3.2 → (7) 2.7

* 개인사업자 연체율 3.0% (총 기업대출 연체율 2.3%)

□ 창업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창업업체 수는 감소(8대 도시 기준)

	02	03	03. 1~7	04. 1~7
· 신설법인수(A, 개)	38,972	33,497	20,719	18,522
· 부도법인수(B, 개)	1,973	2,433	1,383	1,132
* 창업배율(A/B, 배)	19.8	13.8	15.0	16.4

□ 작년도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전년도에 비해 완화되었으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여전히

* 인력부족률 : (02) 9.4%, 20만명 → (03) 6.2%, 14만명 (△6만명)

* 실업률(04.5) : 3.3%, 79만명, 청년(20~29세) 실업률 : 7.3%, 36만명

○ 특히 인력난, 고임금 등 고비용 산업구조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 추세

*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 추이(수출입은행, 백만불, 투자비중) (02) 1,098(31.8%) → (03) 1,331

(36.4%) → (04. 1~6) 887(43.8%)

-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내수부진을 보완
- 04. 1~7월 중소기업 수출은 56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3.0% 증가

	02	03	03. 1~7	04. 1~7
· 수출액(억불)	1,624(8.0)	1,938(19.3)	1,045(17.0)	1,442(38.0)
· 대기업	941(9.7)	1,120(19.1)	623(19.0)	879(41.2)
· 중소기업	683(5.7)	816(19.6)	422(14.3)	561(33.0)

〈 중소기업 경기전망 〉

-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는 둔화되겠지만 유가가 현재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간 5%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경기도 수출호조 및 설비투자 회복으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 고유가, 원자재가격 불안 및 중국긴축정책 등 불확실성 상존

IV.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1.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 중소기업정책은 경제발전 초기의 보호·육성중심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벤처육성을 거쳐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

〈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 · 협동조합법(61), 단체주의계약제도(65), 중소기업기본법(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학공업정책 본격 추진에 따른 부품공급·생산 주체로서 중소기업 육성 필요 · 고유업종제도(79), 지정계열화제도(80) · 신용보증기금(76), 중진공(79), 기술신보(89)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출범(95.1) 등으로 자율과 개방, 경쟁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고유업종 해제예시(94), 단체주의계약 품목축소(95),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법 제정(95), 중소기업청 개정(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 코스닥 시장 개설(96),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98) · 벤처기업특별법(97), 소기업법(97), 여성기업법(99)
--

2.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가

-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업체수, 고용창출 등 양적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으나, 국제경쟁력 제고 등 질적 성장은 미흡
 - ① 중소기업 유형, 성장발전단계를 감안한 수요자 중심 대책 미흡
 - 중소기업 유형, 성장발전단계 등에 무관하게 기술, 자금, 판로, 인력 등의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시행
 - ② 발전가능성 위주의 집중지원 미진
 - 보호·육성 차원의 보편적 지원방식을 취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창업·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은 어려움
- 〈 예시 : 정책자금 분야 〉
- 담보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지원되고,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미흡

③ 보호 위주 정책의 역효과

- 중소기업간의 경쟁과 대기업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직접적인 보호에 치중

〈 예시 : 판로지원 분야 〉

-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경쟁제한적 속성으로 인하여 제품 품질 향상, 원가절감 노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저하

④ 정책의 사후평가와 실효성 확보가 부족

- 기존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 이 지속

〈 예시 : 판로지원 분야 〉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가 집행실적을 단순집 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실제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

소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 육성

-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으로 성장동력 확충
- 창업관련 제도개선 등 창업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한계기업은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을 지원

▷ 종합적 중소기업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 및 판로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 중소기업보호제도를 개편하여 자생력을 제고하고, 공공구매촉진 등 보완책 강구

▷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간 상생관계를 구축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발전 유도

▷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여성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 지방중소기업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V. 중소기업 시책방향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동력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혁신역량을 갖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
-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중소기업 공동체” 구현
- 활발한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기업유형별·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

VI. 2005년 중소기업 주요 육성시책 ('04실적 포함)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가. 창업관련 규제개선 등 창업 원스톱 서비스제공

- 창업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규제개혁 추진회의”에 보고 ('04.8)
-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04하) 및 추진상황 점검('05년)
 - 이행보증금 축소 및 도로확보요건 폐지, 창업시 1만㎡ 부지확보 등 개발 허가요건 완화
 -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간소화 및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창업기간 단축(30일 → 20일) 및 일괄의제처리대상 확대(48개→65개) 등
- 공장설립절차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체계 구축
 - 지방중기청에 “창업규제 신고센터”를 설치('05년)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강화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공장설립 대행, 경영·기술지도, 사업타당성검토 등 지원
 - ('04) 600개 기업, 15억원 → ('05) 1,200개 기업, 30억원

나. 창업지원 기반강화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절차 개선 ('05년 3,500억원)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중진공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 확대 추진
 - * 직접대출비중 : ('04) 36% → ('05) 40%이상
-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기관의 지원비중을 확대
 - 신보의 창업보증율 '08년까지 10%로 확대 ('04 : 0.12%)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율 '07년까지 50%로 확대 ('04 : 7.5%)
- 창업보육센터 운영 효율화
- 센터 확장건립 지원으로 자립운영 및 생산형 기업지원 체제 구축
 - ('04) 35개 BI, 192억원 → ('05) 15개 BI, 75억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후 운영비 차등 지원
 - ('04) 229개 BI 76억원 → ('05) 220개, BI 75억원
- 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네트워크 구축

- '05년부터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협의회 본격 운영
- 예비창업자 양성 및 청년창업 저변 확충
- 창업동아리를 청년창업의 산실로 육성
 -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해 운영비 지원 및 국내의 연수 확대
 - * '04년 현재 221개 대학, 895개 동아리 활동중, '05예산 13억원
- 전문강좌위주의 창업교육과정 확대
 - * ('04) 80개 강좌 → ('05) 120개 강좌('05예산 17억원)
- 창업대학원 설치, 운영을 통해 창업전문가 양성
 - 호서대, 진주산업대 등 5개 창업대학원 선정('04.4)
 - 창업대학원 설치·운영 예정('04.9월 1개대학, '05.3월 4개대학)
 - * 창업대학원 개교 5년 이후에는 자립화 유도('05예산 20억원)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 지식기반서비스업 전용자금 지원을 확대 ('04 : 1,000억원 → '05 : 1,200억원)
- 제조업에 비해 중소기업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조정
 - '05년중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05상)
 - * '04년에는 시범적으로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업 실태조사('04.9~11월)

기술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 확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적극 발굴·육성
 - Global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 ('04 : 3,000개 → '08년까지 1만개)
 - 컨설팅 지원, 주기적인 사후관리, 모범사례 확산 등

- 을 통해 기술혁신 선도
- 제조업 중심에서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까지 확대 발굴
- 제조업, S/W, 바이오, 서비스, 환경 등 6개 분야별 평가 실시
- 기술평가와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과 연계 강화
 -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업무를 기술보증업무에서 분리하여 기술평가단으로 독립('04.7)
 -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04 : 187명 → '08 : 450명)
 - 기술평가단의 기술평가인증서가 '05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이 활용토록 확대시행
 - 기술혁신기업(Inno-Biz) 평가기법 등을 체계적인 신진형 기술평가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민간분야로 확산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개발기술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신기술사업화 타당성평가」를 통해 기술개발 촉진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기술혁신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효과 제고('04: 30억원 → '05 : 30억원)
 - 개발기술 사업화 소요자금 지원('04: 750억 → '05 : 800억원)
 - 이전기술의 실용화 개발자금 출연지원('04: 59억 → '05: 59억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출연 확대('04: 1,330억 → '05: 1,447억원)
 - 전략과제 지원확대 및 타 사업과의 연계지원 강화
 - 「산학연컨소시엄사업」 확대('04: 391억 → '05 : 421억원)
 - 15개 공공기관 R&D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공공기관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운영 강화

- ('04: 6,043억원 → '05: 6,300억원)
- 참여기관 실태조사 및 시정요구권 부여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촉진법 개정('04)
- 수요연계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지원 확대
 - 구매대상기관을 '08년까지 10개 기관으로 확대('04년 5개기관)
 - 지원예산 대폭 확대 : ('04) 40억원 → ('05) 100억원

다.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공정혁신 추진 지원
 - 중소기업의 신공정도입 및 공정개선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최적 공정혁신개발 및 구축 확대('04 : 34억 → '05: 37억원)
- 경영지원 쿠폰제 발행을 통한 경영컨설팅 강화
 -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04 : 60억원 → '05: 100억원)
 - 중소기업에게 경영지원 쿠폰을 저가에 판매하고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민간컨설팅 회사를 선택하여 컨설팅을 받는 체제 구축
 - 경영컨설팅 이용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 경영지원 쿠폰구매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05. 1월부터 시행)
 - 경영지원 쿠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우대
-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활동 강화
 - 「싱글 PPM 품질혁신전진대회」 개최(상반기)
 - 품질혁신 지도(200업체) 및 전문가 양성교육(3,600명) 확대
-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 활용 현장어로 기술지원
 -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 활용 기술지도 통합운영으로 내실화

- (04) 1,800개사 → (05) 1,900개사

라. 중소기업 IT화 및 e-Biz 기반 구축

□ 정보화 선도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일괄지원하는 · 정보화혁신전문기업 · 제도 운영
- 전문기업에서 해당기업의 정보화 진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를 일괄 지원(15개 전문기업 지정, '05: 100개)

□ 중소기업 IT화 경영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개발지원 (' 04 : 160개 → ' 05 : 180개 업체)
- 대학 · SI업체 등으로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지원(연간 1,300개 업체)
- 지방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정보화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05년, 21억원, 7개 지역)
- 동일업종 중소기업간 공동 구 · 판매 등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형 정보화 기반구축 지원 (' 04: 7개 → ' 05: 20개 조합)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저변 확대

-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정보화교육 실시(' 05년, 6,300명)
- 정보화 상시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화경영원의 기능활성화
-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 등 조사연구, 정보화 인력양성,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 완화

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중소기업 바로알기' 對국민 캠페인 전개
-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Dynamic(역동적), Developing(발전적), Dream(꿈과 희망)의 "신 3D 또는 비전 제시 운동" 전개
- 소규모 기업에서 중견기업 · 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과 CEO에 대한 전기 · 연혁집 발간
- 청년층의 규모에 대한 편견 해소 제도화
-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교사들에게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 유도
- * '큰 것이 좋다' 라는 편견보유 정도는 교육기관 종사자 (70.2%)에서 가장 심각
- 대학생 등에게 중소기업 현장 체험, 모의 기업대회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매년 6만명)

나.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 외국인력 도입확대 및 산업연수업체 경쟁력 제고 추진
-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추진(' 04:2.3만명 → ' 05 :3만명)
- 불법 체류외국인 · 고용주 · 알선업체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산업연수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추진
- 산업기능요원 지속배정(4,500명) 및 공공성이 미약한 부분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축소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확대 추진
- *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까지 현수준 유지
- 기능요원 On-line 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분야 전공자격 요구 등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추진

□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촉진

- 채용수요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후 중소기업으로 채용까지 일괄 알선(' 04: 191억원 → ' 05: 213억원)
- 러시아, 인도 등 해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27억원,

250명)

-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하여 대학 교수 등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실험장비,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을 지원 (33억원, 신규)

다. 중소기업 인적자원의 고급화 추진

- 업종·지역 단위로「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실시
 - 종합진단 후 공동 훈련 및 채용, 인적자원 관리 기법 등 인력구조 고급화에 필요한 세부 사업을 Package로 지원(38억원, 신규)
-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 국가 기간산업, 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발전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재직자 교육훈련 활성화(매년 4.5만명)
 - 중소기업 연수원의 과정보별 On-line 상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연수원 활성화 방안 수립
 - * 경남진해에 제4연수원 개원('04.10월) 및 광주·경산연수원에 지역산업특화교육과정 개설 (광주 : 광산업, 경산 : 섬유산업 등)

라.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 조성 등

-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 열·분진·냄새 등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 장비 개발 및 보급 지원('05년, 287억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클린사업 확대 지원('04 : 700억원, 7천개 사업장 → '05 : 1,000억원, 1만개 사업장)
- 중소기업 장기 근속여건 조성
 -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특별공급범위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확대공급 추진('04년 570채 확보)
 -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자녀 중 대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에게 '중소기업 장학금' 지급 추진

- 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 우수사례집 발간·보급(매년)
-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강화
 - 인력부족율, 교육훈련 현황, 인력관련 정부정책 활용도 등 중소기업 인력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매년)
 - 만성적·구조적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수성 등을 분석·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

- 가.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정책자금 지원체계 효율화
 -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제공 확대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속 공급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융자자금 규모 : ('05) 2조 9,500억원
 - 중소기업 전용 P-CBO 발행 지원 : ('05) 500억원
 -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강구
 - 중소기업지원 우수금융기관에 대한 포상,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 정책자금을 장기시설·창업·수출자금 위주로 단순화하고, 직접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04년 26% → '07년 70%)
 - 정책자금 원프로세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원절차와 운영방식 개선 추진
 - 중진공에 자금신청하면 최종대출까지 연계 처리 가능
 - * 관련기관간에 인터넷 망 등과 연계된 내부처리 시스템 구축
 - * 중진공, 보증기관, 은행(3단계) → 중진공 + 보증기관 연계 직접대출(1단계)

나. 신용보증 및 매출채권보험의 효율성 제고

□ 신용보증공급 확대

-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보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담보력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속 공급
 - 보증공급 규모(신보·기보) : '05년, 40조원
 - 지역신보 보증공급 규모 : '05년, 1.7조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확대

-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확대('04: 1조원 → '05: 1.1조원)
 - 실효성있는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어음보험 인수규모를 줄이고 매출채권(포괄근보험) 인수규모를 확대

다.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중소기업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CB) 설립

- 신보와 기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하여 전문신용정보회사를 설립
 - 신보, 기보, 중진공, 산은, 기은이 공동출자하고, 5개 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기업 CB와 공유
 - '05상반기중 기업 CB설립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 위탁보증제도 확대

- 은행이 보증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위탁보증제도 확대
 - 위탁대상 은행을 확대(기업, 국민은행 → 전 은행)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매년마다 재선정
 - 위탁대상 보증금액 확대(5천만원 → 1억원, '05년) 및 기업신용도에 따른 보증료 차등폭 확대 (0.5~1.5% → 0.5~2%)
 - 부분보증제도(80%)에 따라 보증되지 않는 부분(20%)에 대해서는 순수신용대출로 운용하도록 유도

□ 한도대출 제도 활성화

- 기업은행을 통해 총자산 50억원 이상이고 B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132개 기업 → 1,500개 기업)
 - * 신용한도대출은 기업의 대출가능 규모와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고 기업 필요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제도(우량기업에 한하여 운영)
- 현재 1년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도대출의 만기를 1~3년으로 장기화 유도
- 기업은행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른 은행으로 확산 추진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

가. 중소기업의 내수기반 확충

□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강화

- 대기업 영업망 및 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 * 삼성전자, CJ홈쇼핑 등과 우수제품 판매 제휴
- CATV 등 언론매체를 활용,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 ('04) 1,400개 업체 → ('05) 1,500개 업체
- 조합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 전시회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04 : 8회 → '05 : 10회)
- 중소기업제품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 공동상표 개발 : ('04) 6개 상표 → ('05) 6개 상표
 - KAIST브랜드 : ('04) 19개 업체 → ('05) 20개 업체

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강화

- 공공구매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을 개정하여 중기청에 공공구매실태 점검 및 시정 권고 권한 부여('04.3)
- 공공구매 대상기관을 확대(98개 → 115개)하고, 매년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의무화 추진

(45~50% 이상)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확대 : (04) 51.6조원
→ (05) 54조원

-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운영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강화
 - 공공구매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법령을 개정하여 중기청에 공공구매실태 점검 및 시정 권고 권한 부여(04.3)
 - 공공구매 대상기관을 확대(98개→115개)하고, 매년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체제의 정비
 -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신제품에 입찰자격 부여
 - * 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스크린도어” 생산업체 입찰참가 기조치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전부처·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신기술제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추진
 -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 공공구매 이행점검체계 및 구매정보망 구축
 - 중기특위가 매년 관계부처의 공공구매 실적을 분석·평가후 개선대책을 강구 (중기청은 실태조사 수행)
 -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공급자 및 수요자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입찰·낙찰·구매실적을 실시간으로 제공
- 다. 수출시장 개척 지원
- 내수위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속 확대
 - 수출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들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저변 확대(04 : 100억원,

1,200개 → '05 : 130억원, 1,500개)

- * 해외시장조사, 카탈로그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 등 기초적인 수출역량 배양
-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대행회사간 매칭을 통한 최초 수출 대행
 - 수출대행무역회사를 통해 내수기업에게 수출절차를 일괄대행하고 수출능력을 배양시키는 수출대행사업 추진(04 : 145개→'05 : 200개)
- 수출지원센터에 지역별·업종별 “Export Club”을 구성(04. 10월)
 - 중견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수출경험·노하우의 공유시스템 마련
- 중견수출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 중소기업 수출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신규 추진(05 : 30억원)
 - 중동, BRICs 등 해외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04 : 70억원, 101회 → '05 : 102억원, 140회)
 - 기존 수출제품의 해외유통망(Wal-Mart 등) 납품 및 국제조달시장(2조달러 규모) 진출 지원 (04 : 13억원 → '05 : 15억원)
 - * '03년 한국의 미연방정부납품(625백만불, 0.2%로 5위), UN납품(19.7백만불, 0.39%로 48위)
- 수출중소기업의 현지진출 지원거점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거점별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7개소, 2개소 준비중) 등 현지 지원체제 강화
 - 무역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해외시장개척요원으로 양성(연간 1천명)
-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
 - 수출을 하는 데 비관세 장벽이 되는 해외유명규격인증(예: CE, UL)획득을 지원(04 : 204억원 → '05 :

214억원)

-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국제인증제도가 강화 추세(국제적으로 제품 및 시스템분야에 73개 인증제도 실시중)
- 해외바이어의 제품개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R&D, 디자인, 설비투자 등을 수출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11개소)의 기능 활성화 추진
 - 민간전문가 활용, 수출기업간 네트워킹, 파견직원 사기진작 등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 확산
 - 수출중소기업상 포상(반기별 6개), 100대 수출중소기업 홍보(반기별)

벤처기업의 활력회복 등 신벤처정책 수립 추진

가. 안정적인 벤처투자자원 운용 및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조성하여 창업투자조합 및 중소기업 투자 사모펀드(PEF)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05년부터 4년간 투자회수자금 6천억원과 추가출자 4천억원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수요에 의한 안정적인 공급체제로 전환
 - 모태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태펀드의 조성근거, 운영주체, 관리방안 등을 마련(벤처특별법 개정, '04하)
- 다양한 형태의 투자회수 시장 활성화
 - 코스닥시장의 독자적 운영권을 확보하여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주 시장으로 위상 정립
 -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현물자산을 인수·관

리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Distressed Fund) 조성(04, 300억원 규모)

- 벤처캐피탈의 자금 유통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주거래전문펀드(Secondary Fund)의 결성확대('01~'04, 1,000억원 규모)
- 舊株 거래정보망을 구축, 운영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04하 구축, 05년 본격가동)
- M&A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 중소·벤처기업간 M&A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미등록 중소·벤처기업간 M&A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04.4)
 - * 주식교환·현물출자의 특례인정, M&A 절차 간소화 등
 - 창투사 고유계정의 투자의무비용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04하)
 - 창투사가 일정기간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 경영지배 허용 추진('04하)
 - M&A활성화를 위한 전문 펀드조성 확대 추진
 - * 04년중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조합 및 M&A 전문펀드(250억원) 결성
 - 소규모 중소·벤처기업의 M&A 중개비용 지원사업 시행(04, 3억원)

나.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지역의 해외지원센터를 호주·아프리카 등에 추가 설치('04 : 38개 → '05 : 40개)
 -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납품계약, 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미국 SBIR 프로그램 진출을 촉진 지원('04 : 20개 업체 → '05 : 20개 업체)
 - 벤처공동 물류·A/S센터(보스톤, LA)를 통해 시장 개척활동 지원

-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
 - 외국계 전문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해외합작전문펀드 결성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 * '04년 하반기중 Global Star 펀드(1억\$ 규모) 결성 추진
 - 미국·EU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유치 지원('04 : 10억원, 50개 업체 → '05 : 15억원, 70개 업체)

다.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벤처캐피탈에 대한 상시평가시스템 구축
 - 창투사별 이력카드관리제를 통해 창투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04년중 개발예정인 창투사 평가시스템을 통해 창투사의 재무상태, 법령준수여부, 투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05 : 6.5억원)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정기 현장검사를 차등화
- 벤처캐피탈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 창투사의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창투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대도입
 - 창투조합의 전자보고, 조합 ERP, 수탁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개발예정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에 대한 공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코스닥 시장과 같이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구체적인 투자활동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시스템」을 도입 추진
 - * 창투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조합 운용실적, 위법사항 등
 - 창투사(조합) 및 투자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잠재부실 등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
 - *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창투사관리감독 전

문가 Pool 활용

라. 새로운 벤처정책 방향 모색

- 벤처특별법은 한시법으로 '07말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벤처기업의 개념 재정립 및 대체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향후 벤처정책은 벤처캐피탈 등 민간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양적성장에서 질적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 창업의 활성화와 벤처캐피탈시장의 성장 및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연계발전
- 이를 위해 소연구회 구성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새로운 벤처정책관련한 주제별 정책을 설정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개편방향, 벤처종합상사 설립, 1조원규모의 모태펀드 구성 등 다양한 주제를 검토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고도화 촉진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 추진
 - 중소기업 생산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기존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억제
 - 사업전환실태조사, 종합지원계획 수립, 자금·컨설팅·교육 등 지원시책을 법률에 반영('04하)
- 중소기업 생산구조 고도화 지원
 - 중소기업의 자동화, 공정혁신, 인력양성사업 등을 연계한「생산구조 고도화 종합컨설팅」을 실시
 - 08년까지 5,000개 업체에 대한 종합컨설팅('04 : 300개)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자체 구조고도화 이행 사업을 지원
 - 별도의 심사없이 구조개선자금 등 우선 대출
-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에 적극 대응
 - 불가피하게 해외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사전정보제공 및 현지지원 실시로 성공률 제고

- * 중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지 지원센터 설치 추진('05년중)
-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입주 지원('06년, 250업체 입주예정)
 - 시범단지(2만 8천평) 입주 15개 중소기업 선정('04. 6. 5)

상생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

-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
 - 중기협중앙회-전경련간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 *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의 추진
 - 정부차원에서도 중기특위내 대·중소기업 협력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대·중소기업 협력지원센터” *를 설립하여 공동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04: 20억원 → '05: 40억원)
 -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훈련 지원
 -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의 수요연계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04: 800억원 → '05: 900억원)
 - 중소기업·대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확대('04: 208억원 → '05: 238억원)
- 불공정 하도급관행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 현금성 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결제액의 0.3%) 확대
 - 세액공제 대상거래를 확대하고(30일 → 60일 이내 거래), 세액공제비율을 조정(30일 이내 0.3%, 31일~60일 0.15%)
 - 경제적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확대
 - 제조와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는 법적용 분야를 서비스분야까지 포함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

- * 전체 사업자수 대비 하도급법 적용대상사업자수 비율 : 16% → 77%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확대 실시('04: 4만개 → '07: 7만개)
- Network Loan제도 도입을 통한 납품중소기업 지원
 - 구매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Network Loan제도를 도입
 - 기업은행이 신세계, 한국도자기 등 18개 구매기업과 협약체결 완료(납품기업수는 1,500개)
 - '04. 8월말까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등 330개 기업으로 협약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400개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 기업은행의 성공사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 유도('05년)
- 중소기업보호제도를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전환
 - 지정계열화제도는 '04년 폐지, 고유업종제도는 '0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대기업의 사업영역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로 중재
 -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 법률 개정 추진('04말)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수혜기업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
 - 제도폐지로 인한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촉진 등 보완책 강구

소상공인·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 가. 소상공인·여성기업 육성
 - 소상공인 지원강화
 - 매년 높은 수요로 인해 조기 소진되는 소상공인지원 자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04: 3,500억원 → '05:)

5,100억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강화
 - 기존의 지원자금 배분기능에서 창업적성검사, 지역 상권분석 등 컨설팅 기능 강화 (연간 30만건 상담)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중앙센터 기능 확대
 - 지역센터 네트워크관리, 상담사 및 소상공인교육프로그램 개발, 업종별·계층별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증원
 - * (현행) 센터장 1, 운영요원 6 → (계획) 본부장 1, 운영요원 20 (4개팀)
-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 여성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 제공 지원
 - 여성 BI 운영(14억원) : ('04) 14개소 125업체 → ('05) 14개소 135업체
 - 여성창업강좌(80회), e-lancer 양성교육으로 경제활동 촉진 지원
 - * 여성이랜서 양성사업(3억원) : ('04) 12개 과정-('05) 15개 과정
 - 공공기관 여성제품 구매확대('04 : 1.5조원 → '05 : 1.7조원),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15회) 등 판로확대 지원

나. 재래시장의 활성화

-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충 및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지원 ('05 : 950억원)
 -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
 - 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건폐율 확대,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인접지역 동시개발 요건 완화
 -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추진('04 정기국회)
- 재래시장 상인의 경영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
 -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온라인점

포 5천개 분양)

- 대형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 및 신용거래 시범점포 육성
- 시장 상인에 대한 영업기법 교육 및 경영연수 실시
-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기능 강화
- 공동사업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재래시장 상인 공동작업장·물류창고 설치 지원
 - 재래시장 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이벤트 개최 지원
 - 재래시장 홍보 방송실시('04 : 30회 → '05 : 50회)
 - 『전국재래시장박람회』 개최
- 재래시장 안의 빈 점포 활용 촉진
 - 빈 점포를 청년상인 창업장소로 활용 지원
 - 빈 점포를 지역특산물 판매장, 지역주민 문화·복지 시설 활용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방대학의 기술혁신 역량을 중소기업 혁신에 적극 활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제 확대('04: 391억 → '05 : 421억원)
 - 대학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개발 및 실용화 지원(59억원)
 - 이공계교수의 중소기업 기술지도 참여 확대(현재 116개 대학)
 - 산학연간 기술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허부구조 확충
 - 업종별 산학연 기술연구회 결성('04 : 26개 → '08년까지 100개)
 - 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기술연구 소그룹 육성 ('04: 400개 → '08년까지 1만개)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장비 공동활용 체제 구축·운영

- 295개 기관의 연구장비 77,000대, 기술인력 26,000명 DB 구축
- 지방중기청의 시험·연구장비 전면개방 : 5천대

□ 지방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 지원

- 지방대학이 지역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13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
 - * 산자부, 교육부 공동으로 '04년 400억원을 투자하여 13개 대학 선정
- 지역내 대학과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방대의 우수한 석·박사생을 양성
 - * '05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270억원)으로 360개과제 지원
- 중소기업의 대학내 협력연구소 설치를 지원하여 대학과의 기술연계 강화 및 고급 기술인력 활용(33억원, 신규)
- 대학교수와 산업체간의 협력을 위한 가족회사 제도(산업기술대)를 다른 대학으로 확대
 - * 13개 산학협력대학에 대해서도 도입을 의무화

□ 지역혁신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분위기 확산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역내 핵심기업의 집적·네트워크화 거점으로 육성·활용(05 : 100억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H/W와 S/W를 병행지원하되 부실촉진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 촉진지구내 지방대학, 연구소, 지자체, 벤처기업 등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지원 (촉진지구 24개 : 수도권 8개, 지방 16개)
- BI(창업보육센터), TP(산업기술단지), TIC(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을 지방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활용
 - * 창업보육공간, 기술개발, 장비, 교육훈련 등을 종합 제공
-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이 상호연계를 통해 기술혁신

- 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
- 지역혁신 공동체인 이노카페(대화사랑방)의 결성 확대(24개→100개) 및 지역혁신포럼 운용의 활성화

